

민주, '美 대통령실 감청'에 "심각한 상황에도尹심기 경호만"

"동맹국 대통령 직무실 도청 납득 불가" "상식 조치도 없어...협의 아닌 항의해야" 상임위 소집 촉구... "사실 확보 대응해야"

더불어민주당이 미국 중앙정보국(CIA)이 우리 정부를 감청했다는 의혹에 대한 심각성을 토로하면서 엄정 대응을 촉구했다.

국회 상임위원회 차원에서의 현황 파악과 더불어 대통령실 이전으로 인한 안보 누수 가능성 규명 필요성 등을 주장했다.

10일 열린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이재명 대표는 의혹 관련 "모든 내용이 명확하게 드러난 건 아니지만 사실 매우 심각한 문제"라고 우려했다.

이재명 대표는 "대한민국은 주권국이고 한미는 동맹 관계"라며 "동맹의 핵심 가치는 상호 존중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일국 대통령실이 도청에 돌린다는 것도 황당무계하지만 동맹국 대통령 직무실을 도청한 것도 상식적으로 납득 어려운 일"이라고 개탄했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의혹에 대해 "사실이라면 대한민국 외교안보 컨트롤타워와 대통령실을 미국이 일일이 감시하면서 기밀을 파악해 왔던 점에서 심각 문제"라고 했다.

또 "70년 동맹국 사이 결코 용납될 수 없는 행위"라며 "양국 신뢰를 정면으로 깨뜨리는 주권 침해이자 외교 반칙"이라고 지적했다.

이우려 "그러나 윤석열 정부는 대응은커

녕 한미 신뢰는 굳건하다는 말만 반복하면서 미국과 협의하겠다, 타국 사례를 검토해 대응하겠다라는 한기만 소리만 한다"고 개탄했다.

박 원내대표는 "중차대한 사안인 만큼 윤 대통령과 정부에 엄중 요구한다"며 "즉각 미국 정부에 명확한 정보를 요구하고 파악해 국민께 숨김없이 밝히라"고 했다.

또 "미국 정부도 헬맹국으로서의 도리를 지켜 사실이라면 우리 국민과 정부에 정중한 사과와 함께 재발 방지를 확실히 약속하라"고 촉구했다.

이에 더해 "대통령실은 최근 외교안보 라인 출사퇴가 미국 도청과 관련 있는지, 도청 정황을 이번 보도 전 전혀 파악 못했는지 국민 앞에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나아가 "국회 운영위원회와 외교통일위원회, 정보위원회, 국방위원회 즉각 소집을 요구한다"며 "이렇게 심각한 상황인데 대통령 심기경호만 할 생각인가"라고 규탄했다.

최고위원들도 의혹에 대한 비판과 우려를 쏟아냈다.

정청래 최고위원은 "국가기밀이 타국 정보기관에 도감청되고 타국 언론에 보도되는 최악의 보안사고, 보안 참사가 벌어졌다"고 성

토했다.

이재명 대표는 "정부 대응도 한심하다"며 "강력한 의, 책임자 색출, 처벌, 재발 방지 대책과 같은 상식적인 조치도 없다"고 지적했다.

또 "이런 보안 사고는 졸속적 대통령실 이전 때부터 우려되고 예상됐다"며 "미국 정보기관이 무서워 제대로 회의조차 하겠다"라고 우려했다.

더불어 "용산 대통령실 보안 시설을 공사했던 업체들이 보안을 준수했는지도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며 "철저 점검하라"고 촉구했다.

정 최고위원은 "미국에 어떤 자세를 취하는지 국민들은 불안하게 본다"며 "동맹이라도 국가 심장부에 대한 도감청 행위엔 국의 차원에서 강력 대응하라"고 말했다.

이에 더해 "윤석열 정부는 자국민에게 폭압, 고압적 태도를 취하고 외국민에게 저자세로 일관한다"며 "제발 일본과 미국에 할 말은 하라"고 촉구했다.

박찬대 최고위원은 "협의가 아닌 강한 항의를 하고 미국의 사과와 재발 방지 약속을 받아야 할 중대 사안"이라며 "동맹은 종속과 다르다"고 했다.

또 "잘못된 행동은 바로 잡아야 건강한 동맹 관계가 유지될 수 있다"며 "이번에도 어물쩍 넘기면 국제 호구단 평가만 강화된다"고 한탄했다.

서영교 최고위원은 대통령실 이전 속도를 두고 여야 막론 보안 우려가 있었음을 상기하고 "그렇게 급하게 옮긴 이유가 뭔가"라고 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장경태 최고위원은 "일본에 대한 굴종외교를 넘어 미국엔 감청당하고 협의 운운하나"라며 "당장 미국 정부에 진상 규명을 강력 요구하고 사실조사를 위한 정보 요구부터 하라"고 했다.

민주당은 의혹 관련 상임위 차원 행보를 우선하고 향후 대응 방향을 정할 것으로 보인다. 국정조사 추진은 시기상조로 판단하는 것으로 관측된다.

권철승 수석대변인은 "구체적 사실들을 계속 더 확보해 대응해 나가야 한다"며 "어떻게

든 사실 관계를 밝히고 재발 방지를 약속받아야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 "청와대 졸속 이전 때부터 문제 제기가 많았는데 이런 부분 관련 의혹도 풀어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고 대통령실 반응이 너무 저자세란 지적도 있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상임위 차원에서 내용을 수집하고, 객관적 사실 자료를 모아 이를 근거로 향후 계획을 진행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최이슬기자

김영순 북구의원, '공동육아나눔터 지원 관한 조례안' 발의



'공동육아나눔터'는 부모 등 양육자들이 모여 육아정보를 공유하고, 보호자와 자녀가 함께하는 프로그램과 자녀돌봄 품앗이 활동을

지역사회, 자녀 함께 돌보는 돌봄공동체 조성으로 양육 사각지대 해소

지원하는 공간으로 지역을 중심으로 개인, 가족, 이웃, 지역사회가 자녀를 함께 돌보는 돌봄공동체를 조성하기 위해 여성가족부가 2010년부터 추진해온 사업이다.

이번 조례 제정은 북구 지역의 공동육아나눔터 활성화를 통해 도시화, 핵가족화에 따른 자녀 양육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지역의 인적, 물적 자원을 활용한 양육 친화적 환경 조성에 기여하기 위해 추진되었다.

주요 내용으로는 ▲공동육아나눔터의 설치·운영 및 기능 ▲운영계획의 수립 ▲위탁 운영 ▲자녀돌봄 품앗이 활성화 등이 있다.

김영순 의원은 "의정활동을 통해 만나는 부모님들로부터 안심하고 아이들을 놀게 할 곳이 없다는 고민을 자주 들어 왔는데, 이와 같은 양육에 대한 부담이 저출산 문제로 이어지고 있는 것 같다"며 "조례 제정을 계기로 공동육아나눔터의 현장사례들을 꼼꼼하게 살펴보고 지역사회 중심의 돌봄 친화적 분위기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조례안은 오는 11일 경제복지위원회 심사를 앞두고 있다.

이슬비기자

전남도의회 안전건설방위 이동현 위원장, 바르게살기운동 보성군협의회에 격려·지원

전라남도의회 안전건설소방위원회 이동현 위원장(더불어민주당, 보성2)은 7일 보성문화예술회관에서 열린 바르게살기운동 보성군협의회 회장 이·취임식에 참석해 "소외계층 문화교류사업 등 사회적 약자 보호 및 인권과 정의를 지키는 데 큰 역할을 해달라"고 당부했다.

이날 행사에는 김철우 보성군수를 비롯해 임용민 군의회 의장, 전라남도의회 김재철 의원, 바르게살기운동 보성군협의회 관계자 등 130명이 참석했으며 제13대 선영식 회장의 이임식과 제14대 진중구 회장의 취임식이 진행

됐다.

이동현 위원장은 축사에서 "바르게살기운동 보성군협의회는 교통안전캠페인, 소외계층 문화교류사업 등 사회 속 안전과 복지 사각지대가 없도록 살피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며 "군민의 일상 속에 스며들어 더 밝은 사회를 만들어가는 노고와 헌신에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이동현 위원장은 제12대 전반기 안전건설소방위원회 위원장으로서 보성군의 사회복지 구축구역을 살피며 복지향상을 위해 큰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다.

동부취재본부김승호기자

호남신문 광고안내

광고주는 언론 종사자와 더불어 신문산업 발전의 동반자입니다. 한 분 한 분을 소중하게 여기고 단 한 줄의 광고도 감사히 지면에 반영하겠습니다. 믿고 맡겨 주십시오. 여러분의 기대에 신뢰로 보답하겠습니다.

기사제보
(062)
222-2580

광고문의
(062)
228-2580

축하·근조화환 전문점



전국 꽃배달 서비스
60,000

농장직영 광주꽃도매
직통전화 010-2400-7774
주문팩스 062-946-0053